

기본소득당 2020년 총선 핵심정책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 국가>의 시작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의 기본소득,
데이터 배당, 민주주의 배당을 지급한다」

- * 모든 시민에게 조건없이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
- * 데이터 배당 실시로 다가오는 미래사회 데이터 주권 확보
- * 아래로부터의 정치개혁, 민주주의 배당으로 시작

1. 모든 시민은 우리 사회의 공통 부에 대한 공동 소유자이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모든 시민의 공통 부에 대한 권리 보장과 동시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생계 수준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모든 시민에게 매달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한다. 기본소득 인상액은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회에서 결정한다. 2020년 매달 60만 원의 기본소득은 재원은 재분배기여금 구성을 통해 마련하고 재분배기여금은 재원방식에 따라 시민기여금, 탄소세 신설, 토지보유세 강화 등으로 마련한다.

2.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임금노동을 기준으로 하는 전통적 분배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시민들이 생산한 무수한 데이터 집적, 빅데이터 가공과 이를 통한 이윤 창출이 경제 질서의 기반으로 작동하는 시대에 그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 주권 형성, 분배 정의 실현이 필요한 때이다. 그렇기에 데이터에 대한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 활동 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공유지분권 설정, 데이터 기반 경제의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공동소유권의 보장을 추진한다.

3. 보수양당제를 떠받쳐온 국고보조금, 정치후원금 제도를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 배당으로 혁신한다. 시민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따라 민주주의는 보다 성숙해질 것이고, 다양한 정당에 더 많은 정치적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시민들의 정치참여 활성화만이 소수 정치 기득권 집단과 경제 기득권 집단의 폐쇄적인 동맹으로부터, 정치 행위를 시민들 품으로 다시 돌려 놓을 방안이다. 이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매년 10만 원의 민주주의 배당을 지급한다.

정책해설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 국가>의 시작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의 기본소득,
데이터 배당, 민주주의 배당을 지급한다」

- * **주요과제 : 불평등의 심화, 임금노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분배원리의 필요성**
 - 임금노동 중심의 선별적복지체계의 한계 속 양극화 심화
 - 빅데이터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일자리를 줄이는 성장
 - 기후위기의 심화
 - 모두가 정치에 참여할 기반의 필요
 - 새로운 분배전환원칙의 필요
- * **정책기조 : 새로운 분배정의, 공통부 배당원리에 따른 생계수준의 기본소득도입**
 - 새로운 분배정의, 공통부 배당
 - '생계수준'의 기본소득을 도입
 - 각 배당의 독립성
- * **정책모델 : 월 60만원의 기본소득과 데이터배당, 민주주의 배당**
 - 월 60만원 : 시민배당, 토지배당, 탄소배당
 - 미래사회 데이터 주권 확립을 위한 데이터 배당
 - 아래로부터의 정치개혁, 민주주의 배당
- * **재원모델 : 조세와 다른 재분배기여금**
 - 재분배기여금과 재정환상
 - 시민재분배기여금, 탄소세, 토지보유세
 - '데이터공유기금'에 따른 데이터 배당
 - 민주주 배당
- * **정책효과 : 소득불평등 해소와 경제적 종속을 동반한 사회적 차별의 해소**
 - 소득불평등 개선
 - 빈곤의 사각지대 개선
 - 탄소배출량 감축, 생태적 전환
 - 다양한 노동형태에서 노동자들의 개별 협상력 강화
 - 돌봄, 자원활동 등 비 임금노동영역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
 - 가족관계 재구성
 - 빅데이터기반 경제 속에서 데이터 주권 형성
 - 시민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보수양당제 혁신

1	주요과제 : 불평등의 심화, 임금노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분배원리의 필요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근로소득 총액 634조원,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금액 32% 차지 * 2017년 근로소득 소득분위 하위 18%(320만명) 연간 근로소득 1천만원 미만 * 2017년 배당소득 총액 19.6조원, 상위10%가 전체 배당소득의 94% 차지 * 2017년 이자소득 총액 13.8조원, 상위10%가 전체 이자소득의 91% 차지 * 2017년 부동산 양도차익 총액 85조원, 상위 10%가 63% 차지 * 2017년 주식 양도차익 17.4조원 상위 10%가 90% 차지

1. 임금노동 중심의 선별적복지체계의 한계 속 양극화 심화

신자유주의 이전의 복지국가는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전후 복지국가는 강제적 사회보험제도를 핵심으로 한다. 완전고용으로 고임금 고성장이 가능하다면 강제적 사회보험만으로 빈곤은 충분히 예방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 질병, 사고 등으로 소득능력을 잃거나 또는 퇴직하여 소득능력의 결핍이 생길 때 사회보험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꿈꾸었다. 하지만 1980년 경제적 구조는 변하였고 신자유주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일자리 양극화, 일자리와 소득의 탈동조화, 저임금화로 가정은 무너졌다. 공공부조의 형태의 복지제도가 임시방편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완전고용을 중심으로 설계된 복지국가 체계에서 더 이상 완전고용이 불가능한 시대에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워졌다.

2. 빅데이터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일자리를 줄이는 성장

빅데이터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일자리를 줄이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AI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따른 각종 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기존의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생산하는 데이터가 이윤 창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데이터기반 경제체제가 소수의 이윤만을 위한 체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데이터기반 경제에 대한 모두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후위기의 심화

기후변화를 넘어서 이제는 기후위기의 시대가 되었다. 다른 국가들은 2007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07년 대비 2017년 탄소배출량 증가량 세계2위, OECD 국가기준 탄소배출량 6위라는 ‘기후악당국가’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다. 2017년 한국이 연간 배출한 탄소배출량은 7억 9백만 환산톤에 달한다. 이제부터라도 기후위기를 앞당기

는 탄소배출량의 감축에 대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 동안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정책은 사실상 없었다.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라 한국은 온실가스배출량 제한량을 배정받고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제한할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러나 산업계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그동안 온실가스배출권을 사실상 정부가 무상으로 나누어주다가 최근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할당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한 탄소배출량에 감축에 대한 대안으로 핵발전이 정부정책에서 거론되고 있어서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4. 모두가 정치에 참여할 기반의 필요

기존의 정치관계법은 원내에 진입한 정당 중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을 중심으로 국고 보조금 지원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지난 60여 년간 이어져온 보수양당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의 정치관계법은 국민들이 정당에 내는 당비, 정당 후원금에 대해 매년 1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특정 구간 이상의 소득을 얻는 이들만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저소득층과 비임금노동인구의 평등한 정치참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도 하다.

5. 임금노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분배원리의 필요성

2008년 경제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초저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는 금융수익률의 하락을 낳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위험 자본은 디지털 기술회사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몸집을 불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플랫폼 기업들은 10년 후인 2017년에 이르면 시가총액 글로벌 5대 기업에 이름을 올리게 될 정도로 커다란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들은 구래의 산업자본처럼 공장을 짓고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스마트기기의 확산과 사물인터넷의 발전 그리고 이들이 생산한 데이터를 집적하고 가공하는 저장고(silo)와 인공지능의 개발을 통해 자본에 유용한 '빅데이터'를 만든다.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범위는 작게는 자율자행자동차에서 넓게는 전국 범위의 무인 자동화 공장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저렴한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력 자본들의 공장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최적화는 가격경쟁력이 필수인 전 산업부문의 자본에게 뿔레야 뿔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데이터를 고도로 집적한 플랫폼 기업의 아래 전 산업부문이 실질적 지배를 당하는 구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부 가운데 임금노동이 생산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플랫폼 노동이라는 비정규직 보다 더 불안정한 일자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 위기와 파국을 동반한다. 자본주의는 한쪽으로 산업노동과 전형적인 서비스노동을 자동화하면서 다른 한쪽으로 재생산 영역, 돌봄과 여가, 문화예술을 플랫폼 경제를 통해 상품화함으로써 부단히 유사노동소득에 의한 재생산을 유지한다. 그러나 숙련편향 기술변화와 기술적 실업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생산성, 일자리, 임금, 중위소득의 거대한 탈동조화를 보다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현재 중간 숙련 일자리의 공동화, 일자리의 전반적인 저임금화와 불안정화 경향을 마주하고 있다.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기존의 복지국가의 가정이 아래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국지적인 개선이 아닌 전면적인 분배정책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2	정책기조 : 새로운 분배정의, 공통부 배당원리에 따른 생계수준의 기본소득 도입
---	--

공통의 부는 모두의 것이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다시 되돌리는 공통부 배당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매달 60만원의 생계수준을 지급한다. 매달 60만 원의 생계수준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은 불평등과 불안정, 실업이 만연한 시대에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모든 시민의 존엄할 권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1. 새로운 분배정의, 공통부 배당

공통부란 토지, 생태환경과 같은 자연적 공통자산으로 비롯된 수익이거나 지식, 빅데이터, 네트워크 등 인공적 공통자산 수익과 같이,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따질 수 없고 특정 주체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이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배타적인 몫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모두의 몫이 공통부의 핵심적 특징이다.

공통부는 자연적 공통부와 인공적 공통부 두 가지로 나눈다. 자연적 공통부는 토지와 천연자원, 생태환경 등 자연에 의해 주어진 모든 것에 해당한다.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은 공통부 배당원리에 따라 모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이른바 토지배당이다. 또한 생태환경은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되지 않고 모두의 생존을 위해 지켜야 할 인류 모두의 공통자산이며, 생태환경의 사용에 의해 발생한 수익은 공통부 배당원리에 따라 모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이는 탄소세 및 핵발전위험부담세를 부과하여 분배한다. 이른바 탄소배당이다.

자연적 공통부가 본래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인공적 공통부는 인간 전체가 생산한 부이지만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생산된 부는 첨단 기술발전과 사회적 인프라가 축적해온 결과이다. 우리는 이것을 시민배당과 다가올 빅데이터 중심의 플랫폼 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데이터배당실시를 통하여 분배하고자한다.

2. '생계수준'의 기본소득을 도입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최저생계급여를 기준으로 기본소득 지급액과 재원 마련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기본소득 지급액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정부가 제시한 최저생계급여가 60만 원 미만이기예, 생계수준 기본소득안으로서 60만 원을 제시한다, 향후 인간다운 삶의 조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변화에 따라 현재 제시된 기본소득 매달 60만 원은 보다 더 인상될 여지가 크다. 이처럼 생계수준 기본소득안을 제시하는 것은 급격한

사회 변화의 시기에 부분기본소득을 넘어서 완전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기본소득이 단지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의 원칙으로 제시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각 배당의 독립성

시민배당, 토지배당, 탄소배당, 민주주의배당, 데이터 배당은 각각의 독자적 의제로도 가능하다. 제시된 매달 60만원의 생계수준 기본소득 모델은 시민배당, 토지배당, 탄소배당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에 더해 민주주의배당과 데이터배당이 추가된다. 개별 배당은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해소, 핵 발전과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체계의 종식과 탄소배출량 제로화, 모든 시민의 정치참여 보장, 데이터기반 경제의 민주화를 목표로 한 시민세, 토지보유세, 탄소세, 핵발전위험부담세, 민주주의기금, 데이터경제기금 등을 재정 원천으로 한다. 이처럼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은 공통의 부에 대한 공통의 배당의 합으로 구성된다.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은 헌법이 규정한 인간 존엄의 보장으로서의 생계수준 소득의 확보라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배당, 토지배당, 탄소배당, 민주주의배당, 데이터배당 각각은 독자적인 의제로서도 가능하다. 즉 현실 정치에서 제시된 배당 중 어떤 하나라도 먼저 도입된다면, 그것은 각 의제영역의 공통부 배당론의 관철로 이해할 수 있고 지급수준이 낮은 '부분기본소득'의 도입으로서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실정치에서 각 배당의 합으로 구성된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이라는 제안 중 어떤 한 항목만이 먼저 도입되어 일단 부분기본소득이 실현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는 개별적인 배당의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추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다른 세목이 도입되어 생계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부분기본소득, 즉 개별적으로 도입된 공통의 부에 대한 배당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계수준 기본소득의 지급액까지 빠른 시일 내에 확장되어야 한다.

3	정책모델 : 월 60만원의 기본소득과 데이터배당, 민주주의 배당
---	-------------------------------------

매월 60만원	시민배당
	토지배당
	탄소배당
추가분	데이터배당 : +a
	민주주의배당 : 매년 10만원

1. 월 60만원 : 시민배당, 토지배당, 탄소배당

매월 60만원의 기본소득은 시민배당, 토지배당, 탄소배당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추가적으로 데이터기반 경제의 데이터 생산자인 우리 모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에 대한 모두의 공유지분권, 공동소유권을 설정하여 데이터배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정치할 권리의 확보를 위하여 매년 10만원의 민주주의배당을 지급하고자 한다.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급금은 매년 국가 총생산량과 물가, 최저생계비등을 고려하여 매년 상승한다.

시민배당은 기본소득 실시를 위한 시민재분배기여금을 재원기반으로 한다. 시민재분배기여금은 통합소득(근로소득 금액 + 종합소득금액)에서 15%, 선별적 현금지급체계 통합(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청년구직수당, 아동수당), 근로·장려세제 통합, 법인세 수입 중 15%를 재분배기여금으로 전환되어 구성한다.

토지배당은 민간 부문 토지자산 전체에 1.5%의 토지보유세를 매겨 재원으로 사용한다. 2018년 한국은행 자산통계 기준으로 민간보유 토지자산규모는 6167조원이다. 면세구간과 특혜가 많고, 낮은 실효세율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용도 구분 없이 민유지 전체를 대상으로, 비과세/감면 없이 인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의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이를 모든 국민들에게 토지배당으로 지급한다.

탄소배당은 탄소배출량에 대한 탄소세 신설과 핵발전위험부담세를 과세를 통해 배당을 지급한다. 2017년 한국은 7억 914만 환산톤의 탄소배출량을 기록했다. 이는 OECD 전체국가 6위이다. 핵발전예 대해서는 발전원가 대비 위험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2. 미래사회 데이터 주권 확립을 위한 데이터 배당

데이터배당은 빅데이터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바탕으로 매년 주식상장 기업 전체 시가총액에 1%를 매겨 '빅데이터공유기금'에서 관리하여 전국민에게 배당을 실시한다.

3. 아래로부터의 정치개혁, 민주주의 배당

민주주의 배당은 일정 소득이상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10만원 한도의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전 국민에게 확대실시 하는 정책이다. 사용하지 않은 민주주의배당은 그대로 다시 국고로 환수된다.

4	재원모델 : 재분배기여금 형성
---	------------------

기본소득 매월 60만원 모델				
인구규모	재원규모	월 1인당 배당금액		
5170만 명	372조 2400억 원	60만 원		
시민배당				
재원 구분	과세표준	세율	재원 규모	
시민재분배 기여금	통합소득	721조 3616억 원	15%	108조 2042억 원
	세제 개편에 따른 추가 산정 종합소득 금액	383조 1642억 원	15%	57조4647억 원
기업의 법인세 일부(15%) 시민배당 기금 전환	-	-	9조 2천억 원 (2018년 61.5조)	
선별적 현금복지 통합	-	-	34조 4715억 원	
근로·자녀장려금(EITC) 통합	-	-	4조 3428억 원	
계	-	-	213조 6832억 원	
토지배당				
재원 구분	과세표준	세율	재원규모	
토지보유세 강화	6167조 원 (2018년 민간 토지보유가치)	1.5%	92조 5050억 원	
계	-	-	92조 5050억 원	
탄소배당				
재원 구분	과세표준	세율	재원 규모	
탄소세	-	-	70조 200억 원	
핵발전위험부담세	-	-	8조 원	
총계	-	-	78조 200억 원	
(총계의 90%)	-	-	70조 218억 원	
기본소득 재원 총계 : 376조 2100억 원 (재원의 101.1%)				
데이터배당 : 60만원의 + 'α'				
재원 구분	재원규모	월 1인당 배당금액		
빅데이터공유기금	-	α		
계	-			
민주주의배당 : 연 1회 10만원				
재원 구분	재원규모	연 1인당 배당금액		
일반 재정	3조	10만원		
계	3조			

□ 재정해설

1. 기본소득으로 사용되는 재원은 일반조세와 다른 재분배기여금이다.

시민배당, 토지배당, 탄소배당, 데이터 배당의 재원은 각각, 시민재분배기여금, 토지배당기여금, 탄소배당기여금의 성격을 가진다. 각 기여금은 주요 목적이 다르지만 무조건적인 공통부배당이며 재분배기여금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재분배기여금의 성격은 일반조세와 다르다. 준조세인 사회보험료와도 다르다. 재분배기여금에는 조세의 국고적 기능이 전혀 없다. 기본소득도 다른 모든 복지 및 공공서비스 지출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 지출의 형태를 취하지만, 기본소득은 과세 등의 방법으로 재원이 마련되면 전액 $1/n$ 으로 즉시 배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담액과 기본소득 배당액의 차이만이 순수 증세다. 이 차액의 합계가 순증세의 규모이고 재분배 규모다. 모든 국민에게 월 6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에서 모든 가계소득에 부과하는 순증세 규모는 재분배기여금 조성을 위한 명목증세 약 310조원의 가운데 절반가량인 160조원정도에 불과하다

2. 시민재분배기여금은 모든 소득의 15%를 부과한다. 이는 월 60만원으로 인한 수혜와 부담을 누구나 평이하게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비례적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시민세는 면세구간이 없다. 또한 이와 별도로 현재의 조세체계에서의 비과세감면 제도를 일괄적으로 없애고 이를 공공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재원으로 돌릴 것이다. 공공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위한 재원과 규모는 주요 정책항목에서 서술한다.

3. 탄소세는 탄소밸생환산톤 비례로 1환산톤당 10만원의 비율의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부과한다. 구체적인 세율을 정하는 작업은 1톤당 10만원의 탄소세 과세를 제품별로 화석연료 사용량 비율 등을 통해 추후 추정한다. 핵발전 위험세는 원료인 우라늄과 핵연료 사용을 위한 재처리과정에 소모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1kwh당 60원을 비례로 발전량에 직접 부과한다.

4. 토지배당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전체민간부문소유토지자산의 1.5%를 토지보유세로 매기고 배당을 실시한다. 현재 한국의 재산세 실효세는 0.168%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OECD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치의 토지보유세를 매기는 미국에서도 평균 실효세율은 1~4%이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도 고정자산에 1.4%와 도시계획세 0.3%를 합하여 1.7%의 토지관련과세를 하고 있다.

5. 데이터배당은 독립된 '데이터공유기금'이라는 데이터 가버년스를 설립하여 모든 주식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1%를 빅데이터에 대한 전국민적 공유지분권으로 설정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월 60만원 이외에 추가로 배당한다.

6. 민주주의배당은 일반재정에서 매년 국민들이 사용한 민주주의배당금만큼의 재정을 충당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적립하지 않는다.

6	정책효과 : 소득불평등 해소와 경제적 중속을 동반한 사회적 차별의 해소
---	--

1. 소득불평등 개선

15%의 소득에 평률적으로 세금을 매기고 이를 모두 기본소득으로 분배함으로써 지니계수(소득불평등지수)가 15% 개선된다. 2018년 0.345의 소득불평등 지수는 0.2975로 개선된다. 또한 소수에게 집중되어있지만, 다양한 면세/공제 혜택이 있어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소득에도 15% 일률적으로 거두고 분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소득불평등 해소는 훨씬 클 것이다.

2. 빈곤의 사각지대 개선

소득양극화의 대안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EITC(근로·자녀장려세제)는 빈곤최저선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또한 생계급여를 비롯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산심사와 소득의 유무를 까다롭게 따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빈곤을 탈출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기본소득은 자산심사나 노동의유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에 따른 행정비용도 낮음과 동시에 일반 소득을 높여줌으로 빈곤의 사각지대를 개선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3. 탄소배출량 감축, 생태적 전환

탄소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탄소배출량감축에 효과적이거나 일반소비재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조세저항을 겪는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탄소세에 따라 그것을 전국민에게 배당을 한다면, 탄소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동시에 생태적인 소비와 삶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배당을 받는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4. 다양한 노동형태에서 노동자들의 개별 협상력을 강화

안정된 일자리는 줄어들고 계약직,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동형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노동형태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과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협상력을 늘리기 어려운 조건에 처한 경우가 많다. 기본

소득은 최소한의 생존기반을 제공하여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생존 때문에 최악의 노동 형태를 선택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할 것이다.

5. 돌봄, 자원활동 등 비 임금노동영역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

임금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보장되는 기본소득은 임금 노동 바깥에 존재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자 보장 방안이다. 비임금노동 영역의 다양한 활동들의 사회적 인식 전환과 실제 다양한 시민들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6. 가족관계 재구성

남성을 부양자로 전통적인 가족구조 중심으로 설계되어있는 현행 복지제도를 넘어 기본소득은 여성/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최소조건을 부여하여 가족관계 내에서 권력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또한 기본소득은 개개별로 보장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남녀가족구조를 넘어서 다양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다.

7. 빅데이터기반 경제 속에서 데이터 주권을 형성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속에서 ‘빅데이터기금’을 통한 데이터가버넌스 형성은 데이터 이윤을 공정하게 모두에게 배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데이터 인클로저에 대항하여 개인정보를보호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8. 시민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보수양당제 혁신

보수양당제를 유지해온 국고보조금, 정치후원금 제도를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배당으로 혁신한다면, 국민들의 정치참여의 활성화에 기반하여 다양한 정치적 지향과 목표를 가진 정당들이 시민권을 획득할 기반을 마련하며 이에 따라 민주주의는 보다 성숙해질 것이다.

기본소득당 2020년 총선 주요정책

<당신이 누구든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국가를 위한
5대 공공-사회서비스 확장 정책 -

- | |
|-------------------|
| ① 무상 대중교통 실시 |
| ② 무상 보육/돌봄 서비스 |
| ③ 무상 교육 |
| ④ 무상 의료 및 공공병원 확대 |
| ⑤ 공공임대주택 확장 |

1. 전국민에게 월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공공-사회서비스의 무상화 및 확장을 통하여, 보다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한국은 GDP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의 공적 지출은 11.1% (2018년)으로 OECD 29개 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공적 지출 비율은 20.1%로 한국은 평균치의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3.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시장의 확대와 낮은 수준의 공공/사회 서비스의 질은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만든다. 공공 보육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공적부문이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에 대부분 사람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며 민간시설을 이용한다. 하지만 이 민간시설 조차 높은 지불 부담 대비 서비스의 질은 만족도가 떨어진다.

4. 한국의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확충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자유주의정책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공공-사회서비스 분야는 '사회투자전략'의 일환으로 시장에 맡겨졌으며, 정부는 민간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민간부문 공공/사회서비스 분야를 확충해왔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시 높은 부담 비용과 서비스 만족도 문제는 뒤늦게 불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보육과 돌봄 서비스 이용 비율은 여타 복지 선진국에 비해 가계경제 대비 높은 지출비용을 보인다. 이는 명백히 '시장실패'현상이며, 민간시장에 맡겼던 공공/사회서비스를 다시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한다.

5. 5대 무상정책 실시를 위한 재원은 소득/세액공제를 폐지하여 거둔 세액 그리고 기업의 법인세율 최구구간 실설을 통하여 마련한다. 소득/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은 소득재분배에 역효과를 가져다 준다.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세액공제 또한 산출세액의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이거나, 부자들이 더 많이 지출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역진적이다. 물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본래목적은 세금감면을 통한 특정한 활동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재분배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 세액감면과 소득공제를 통한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유도될 필요가 있다.